

대전·충남·충북

대전·충남 : 세종시·충남도청 신도시 등 대형 사업 '준비'

곽 상 훈 | 대전일보 기자

대전 - 광역 교통망·산단·호수공원 등 공약

세종시와 충남도청 신도시, 대덕특구 2단계 조성 등으로 대전과 충남 지역 건설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전 지역에서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 하천 복원사업을 비롯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남부권 호수공원,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도시철도 세종시 연결 및 청주공항 경전철 구축 사업 등이 궤도에 오르면 대전 지역 건설경기 전망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지난달 취임을 맞아 임기 동안의 시정 목표를 '한국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정하고 세종시와 대전을 제2 수도권으로 형성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먼저 청주공항~정부대전청사~세종시를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및 국방벤처산업단지 조성, 대덕특구 첨단 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였다. 대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추진 기획단과 도시환경개

선사업단을 꾸리고, 조례를 만들어 원도심 지원과 재래시장 시설 개선 등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지 위에 HD드라마 타운을 조성하고 첨단 놀이기구 등을 대거 유치하는 등 복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염 시장이 예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공언했던 서남부 호수공원 조성 여부도 관건이다. 도안동·원신흥동 일대에 2,000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50만㎡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놔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대전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인가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충남 - 세종시와 도청 신도시 건설

충남의 경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안희정 도지사가 당선되었지만 화두는 역시 세종시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손꼽히는 세종시 건설에는 지난 2007년 착공 이후 용지 매입에서부터 철거, 공사에 이르기까지 5조 4,893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22조 5,000억원 중 24.4%가 집행된 것으로 이곳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막대한 자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으로 추진되면서 행정도시 첫 마을 공동주택을 비롯, 정부청사, 22



충청남도 신청사 조감도

개 생활권 내 공동주택 및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60여 개의 이르는 각종 건설공사가 2,200만평의 광활한 대지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해마다 1조원이 넘는 공사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건설 현장인 이곳으로 건설사들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 입주가 예상되는 행정도시 첫 마을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생활권 내 공동주택의 경우도 분양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면서 용지를 분양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단지로 조성된 곳에서 분양이 실패한 곳은 전국적으로 없었다”며,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내년 입주에 따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세종시 인근 지역의 부동산도 들먹이고 있다. 세종시 인접 지역인 연기군과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소진되는

등 세종시 원안 추진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충남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도 건설경기가 활황을 이룰 전망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 사업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신도시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은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에 2020년까지 2조 6,1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인구 10만(3만 8,500세대)의 도청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 규모가 큰 사업이다.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해 오다 지난해 6월 착공된 도청 신청사 건립 공사는 부지 조성과 청사 신축 공사가 각각 25%와 6%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말 기관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주거단지 조성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이들 기관의 직원을 수용할 아파트를 3,500여 세대 규모로 건립해 1만 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2013년까지 총 1만 세대(3만명)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청 신도시 조성 공사에는 대기업 건설사를 비롯, 지역 건설업체 등 15여 곳이 부지 조성 및 청사신축 공사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아파트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항 개발보다는 일반 시행으로 전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주택 건설사들이 이마저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남지역 부동산 시장을 어둡게 하고 있다.

충남도청 개발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기관 입주 시기에 맞춰 일반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토지 매수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시행으로 방향을 바꿨다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공동주택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만큼 지역

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둡게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입주가 확정됐다 무산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나 충남에 입지할 경우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9년까지 16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으로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충청권에 입지할 경우 부지 조성 및 연구 시설, 공동주택 등 건설 공사가 쏟아질 전망이다.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란 호재를 만나 충남 지역에선 건설경기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선도지구인 행복지구(금강)에도 대기업 건설사를 비롯, 다수 지역 업체가 참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

충북 : 국가 균형 발전의 전지 기지로

정 삼 철 | 충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충북 도지사로 당선된 이시종 도지사는 선거 기간 동안 ‘서민 도지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당선 직후 이시종 도지사는 5개 분과의 정책기획단을 꾸려 그동안에 추진해 온 도정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선거 공약 사항들과 지역 현안들을 검토하여 총 254건(공약 사업 111건, 일반 시책 143건)을 지역 발전 검토 과제로 선정하였다.

정책기획단에서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여 공약

으로 추진할 사업과 일반 시책으로 추진할 사업, 통합하여 추진하거나 기타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해야 할 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1단계로 7대 분야 236개 공약 사업을 추려내고, 다시 2단계로 5대 분야 111개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최종 검토하게 되었다. 이시종 지사는 ‘함께하는 충북 :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도정의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찾아가는 평생 복지, 살 맛 나는 서민 경제, 농촌도시 균형 발전, 창의적인 문화 예술, 참여하는 열린 도정 등을 5대 도정 목표로 정했다.